

# 과로사 부추기는 장시간·야간노동, 기업 규제와 감시 철실했다

- 전국물류센터지부 정성용 지부장 인터뷰

유청화·임용현 상임활동가

쿠팡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는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의 결합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훼손해 왔는지를 극명히 드러냈다. 윤석열 퇴진만큼 중요한 것은 광장에서 지켜낸 민주주의를 일터와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 아닐까. 1월 23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정성용 지부장을 만나 이야기 나눴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노동시간 유연화를 맹렬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몸담고 있는 현장이 물류센터이다 보니까, 쿠팡 현장의 과로사 문제를 빼놓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20년 쿠팡물류센터지회 설립 이후 지난 5년간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분이 19명인데, 그중 12명이 야간노동을 했다고 해요. 사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쿠팡의 로켓배송, 심야노동을 규제할 수 있을지... 별로 기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선 쿠팡

이 대정부 로비에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겠죠. 또 하나는 물류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만큼 심야노동, 장시간 노동도 덩달아 확산하는 상황을 어떤 정권이 들어선들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게다가 주 120시간에서 시작해 주 69시간, 이런 식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아예 철폐하려는 시도를 버젓이 해왔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물류산업은 주 최대 52시간을 연장근로 상한으로 두지 않아도 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거든요.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도 운송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돼서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됐죠. 사실 운송 관련 업종이 아닌데도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터 준 것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온갖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노동시간 규제를 피할 수 있게 우회로를 열어준 거죠.

급변하는 정치 일정 속에서 '주 4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동시간도 양극화되고 있는 것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주 4일제... 충분히 해 봄 직한데도, '그렇게 해서 생계가 되나?' 사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장시간 노동으로 생계를 해결하려는 경향도 뚜렷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돌아가신 장덕준 님에 대해서 쿠팡은 이렇게 얘기했죠. 일용직 신분이니 본인이 원할 때 나오고 원하지 않으면 쉬면 되는데, 억지로 시키지도 않은 일을 굳이 출근 신청해서, 일하다가 죽은 거 아니냐고요. 결국 쿠팡은 "과로사는 개인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일용직이라서 출근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단 얘기도 실은 억지 주장이죠. 오히려 쿠팡이 요구하는 업무량을 능숙하게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걸 하루하루 증명해 내야 하는 게 일용직 노동자들 처지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에게겐 장시간 노동이나 고정 야간노동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 4일제 얘기가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겉보기엔 자발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희 같은 현장들과 거기서 비롯한 과로사 문제는 오히려 비가시화되는 게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윤석열 퇴진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로사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전국물류센터지부 정성용 지부장. 출처: 유청희

쿠팡이 3년 전에 '만근수당'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한 달 만근을 하면 수당 14만 원을 지급하는 식인데요. 14만 원을 받으려면 하루도 결근해선 안 되고 심지어 무급병가를 사용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아프면 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야 노동자들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결근하면 일당 10만 원에 만근수당 14만 원이 한꺼번에 날아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프다고 하루 푹 쉴 생각을 하겠어요?

결국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야만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의 굴레도 벗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 시급이 낮으니 과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노동자를 탓할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과로사를 유발하는 기업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노동시간 규제가 제대로 작동할 때, "그럼 우리는 노조로 뭉쳐서 시급을 올리자"라는 제안도 현장에 호소력 있게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알터**